

남 탓만 하는 해경... 민간에 책임 떠넘기기

돌고래호 전복 사고...해경의 이상한 변명

승선 인원 혼선→“민간 대행신고소 허술한 관리 탓”
구조 지연 원인→“승선하지 않은 사람 거짓증언 탓”

입출항 관리책임 회피...“법적 문제 없다” 해명만

해경이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승선인원 혼선은 민간 대행신고소의 허술한 관리로, 구조 지연은 승선하지 않은 사람의 거짓 증언 탓에 일어났다는 변명이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로 조직 해체가 지 감수하며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해경이 또 다시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부끄러운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출항 관리, 민간에 맡겼다=해경은 “민간 자율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민간대행신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복된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 남성항도 (입출항 신고를) 민간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승객 숫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도 선장이 민간 대행신고소에 승선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이

며, 해경이 모든 신고소를 직접 관리하기는 물리적으로도 힘들다”고 해명하면서 “절차에 따라 민간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경의 해명에 대해 어민들과 돌고래호 유족·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경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어항의 경우 민간에 입출항관리를 맡겼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책임은 해경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낚시관리 법률에도 낚시어선 출입 신고 업무는 해경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고 직후 해남 남성항 민간대행소장 A씨는 “5만원 받고 새벽 시간 낚시어선 관리를 누가 하겠느냐. 나는 처음부터 낚시어선 선주 5명과 해경이 모인 자리에서 못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해경은 내게 책임을 지우려 한

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경은 민간대행소장인 A씨와 돌고래호 선주를 수사대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증언 탓이라니”-역올한 미승선자=“실제 탑승하지 않은 탑승객 B(43·해남)씨의 거짓대담으로 해경의 사고 접수시간과 함께 초동조치가 늦어졌다.” 지난 7일 오후 사고 이후 세번째 브리핑에서 해경이 밝힌 설명이다. 해경은 “지난 5일 밤 8시39분 B씨와의 통화에서 B씨가 돌고래호에 승선 중이라고 답해 돌고래호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또 돌고래호의 사고를 처음 신고한 돌고래 1호 선장의 최초 신고(5일 밤 8시10분)도 “(상추자도 출장소를 방문한 해당 선장이) 돌고래호의 연락이 안된다는 식의 중얼거림만 있었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고 신고는 아니었다”면서 사고 접수 및 초동조치 지연의 책임 일부를 민간

에 돌렸다.

그러나 지난 5일 밤 7시께 추자도에서 입출항신고를 마치고 해남으로 떠난 돌고래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출발한 지 39분 만에 최종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탑승자의 거짓 대담, 돌고래 1호 선장의 중얼거림식 신고 접수와 관계 없이 해경이 선박 이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V-PASS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탑승자 B씨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고 당일 밤 TV를 보던 중 해경이 전화를 걸어와 ‘돌고래호 잘 가고 있나요?’라고 묻기에 얼떨결에 ‘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그 뒤 아차 싶어 5분도 안 돼 다시 해경에 전화를 걸어 ‘나는 그 배 타지 않았다. 무슨 일 있나 확인해봐라’고 말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진도·완도까지 수색범위 확대

가족들 “동원 선박 과장” 지적

해경이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에 저인망어선을 투입하고, 수색 범위를 진도, 완도 해역까지 확대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러나 사고 초기 수색 동원 선박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고 효과적이지도 않았다며 뒤늦은 해경의 수색 강화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실종자 수중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저녁부터 저인망어선 16척을 동원, 추자도 근해 해저도 수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실종자가 원거리까지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진도군 조도, 완도군 보길도 일대 해안가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한 해안수색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해경은 현재 해경 합정 25척, 해군 합정 5척, 관공선 9척, 어선 등 40여척의 배를 투입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3개 구역을 설정,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해경의 저인망 어선 투입 결정과 수색범위 확대에도 돌고래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초기 수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남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초기 실제 수색·구조작업에 투입된 배는 단 몇 척에 불과한데도, 경비함정 28척이 현장에서 조명탄을 쏘면서 수색작업을 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조명탄을 쏘는 데 필요한 항공기가 기상 탓에 뜨지 못해 사고 직후 조명탄을 활용한 야간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매달 5만원 주고 출입항 관리 맡긴 전남 민간 대행신고소 300곳 넘어

어촌계사무실·자택서 업무
해경, 교육·관리 제대로 안돼
600여 곳은 신고소도 없어

해경이 매달 5만원의 활동비를 주고 위촉한 출입항 민간 대행신고소가 전남 지역에만 모두 300여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지역 소규모 어항이 모두 900여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 대행신고소마저 없이 어선이 입출항하는 곳이 600여곳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8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서해본부 관할에는 안전센터 21곳(군산 4곳), 출장소 64곳(군산 13곳), 민간 대행신고소 328곳이 있다.

지역별 민간 대행신고소는 완도서 관할 105곳, 여수서 119곳, 목포서 104곳이다.

대행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에서 본인 동의를 얻어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한다. “평소 협조적인 분들을 위주로 선정한다”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대행신고소장은 매달 5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별도 사무실 없이 어촌계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출입항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본업과 겸하면서 출입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행신고소장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경의 ‘선박 통제규정’에는 ‘관할 구역 대행신고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출입항 관리사항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 및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확한 교육 시간이나 교육 방법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 실제 교육과 출입항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남지역 소규모 어항(마을공동 어항)에 대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규모 어항은 모두 883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198곳으로 가장 많고 완도 196곳, 고흥 124곳, 여수 121곳, 진도 96곳 등이다. 이번에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에도 36곳이 있다.

소규모 어항은 국가 어항이나 지방 어항, 어촌 정주어항 등과는 달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가 대부분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돌고래호 전복사고 발생 나흘째인 8일 경찰이 제주 추자도 해안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낮 이후 추자도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않기로...가족들 수욕

정부가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돌고래호 실종·사망자 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합동분향소 설치는 고려하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참사 같은 범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는 기존의 특별재난상황과 달라 정부 차원의 합동분향소 설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분향소 설치 여부보다는 구조 지연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입장을 수욕했다.

대책위는 “합동분향소는 없어도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초기 대응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았다더라면 우리는 더는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물카 고교생 출렁랑쳤다 ‘달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출렁랑쳤지만 결국 달미.

○8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15)군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남구 봉선동 E마트 2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한 터미널과 병원 등에서 30초 분량의 몰래 카메라 동영상 40여개를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A군은 수상한 김새를 느낀 B씨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자 재빨리 달아났다. 새 새만에 인근 병원에서 붙잡혔는데,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찍었으며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7층 상가 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